

“행안부는 완주-전주 통합 불권고 하라”

완주-전주 통합 반대대책위, 도청 앞 기자회견… “완주 군민 65% 통합 반대… 민심 무시 말라”

완주-전주 통합을 반대하는 지역 인사들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합 불권고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완주-전주 통합 반대대책위원회(상임대표 송병주)는 27일 오전 전북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군민의 압도적 반대 민심을 무시한 채 강행되는 통합 추진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송병주 상임대표를 비롯해 윤수봉·권요안 전북도의원, 국영석 전 고산농협장, 이문승 김대중재단 완주지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통합 반대 의지를 명확히 했다. 대책위는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지난 7월 23~24일 코리아정보리서치 조사에서는 ‘통합 반대’가 65%, ‘찬성’이 30.7%로 나타났다. 8월 초 데일리 리서치 조사에서도 반대 71%, 찬성 28%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송병주 상임대표는 “여론조사 결과는 민심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추진 세력은 현실을 애국하고 통합 명분만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절차상 문제점도 강하게 지적했다. 애초 7월로 예정됐던 주민



완주·전주통합반대완주군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7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완주·전주 통합 불권고 및 모든 추진 절차 즉각 중단'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투표가 8월, 9월을 거쳐 국정감사가 열리는 10월로 미뤄졌고, 최근에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추진하려는 움직임까지 감지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는 주민 의사를 확인하겠다는 본래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정치적 계산만 앞세운 것”이라며 “통합을 특정 정치인의 성과나 업적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법적 측면에서도 통합 반

대 명분을 제시했다.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특별법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반드시 통합을 ‘권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주민 의사에 따라 ‘불권고’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주민 다수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행안부가 통합을 권고한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처사”라며 “행안부 장관은 민심을 직시하고 ‘불권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도지사가 주민투표 공정성을 보장해야 할 중립적 위치를 벗어나 통합 찬성 홍보에 앞장서고, 반대 논리를 비하하는 등 편향적 태도를 보였다”며 사과와 추진 철회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완주-전주 통합을 불권고하고 모든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 김관영 도지사는 편향된 행보에 대해 사과하고 주민투표 중립 의무를 준수할 것, 통합 찬성 단체는 군민의 다수 의견을 존중하고 절차 지연 필수를 멈출 것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완주-전주 통합은 특정 정치인의 업적이나 선거용 카드가 아니라 군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며 “완주군민의 자치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참석자들은 “행안부는 완주-전주 통합 즉각 불권고하라”, “통합 추진 즉각 중단하라”, “강압적 추진 김관영은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현재 완주-전주 통합 추진위와 반대 대책위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조속한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발주용역 평가 변경에 업계 반발

익산시, '2035 익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발주기준 변경 PQ → 제안서 평가로 돌연 바뀌… 특정 업체 배점 높아 특혜 소지 ↑

익산시가 14억원이 넘는 '2035 익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진행해 왔던 PQ(사업수행능력 평가)평가 기준을 돌연 처음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방법으로 변경해 최근 사전규격을 공고하자 관련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엔지니어링 업계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한 고시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기술용역을 발주 할 경우 관련법을 적용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기준과 절차를 정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하여 고시한 기준으로 전북에서는 지역에 맞는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555호, 3월 19일)을 공고해 세부평가기준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관련업계는 PQ는 엔지니어링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까다로운 절차와 자격 여건 등을 갖춘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나,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은 행안부 소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이번에 수행하는 사업과도 크게 괴리되는 것은 물론,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와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은 입찰 방식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 엔지니어링업체에 따르면 건설

기술진흥법에서 적용하는 기준 적용(PQ방식)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에서 10억원 이상일 경우 100점 만점에 정량적 평가(기술)가 70점, 가점점수가 30점으로만 평가되고 있는 것에 반해, 협상의 의한 계약 방식은 절대평가로 이뤄지는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으로 기술 평가는 20점인 반면, 상대평가인 정성적(평가위원 개인 의견)으로 진행되는 서류 평가는 무려 60점의 배점이 부여돼 사실상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것으로 특혜 소지의 개연성이 많아 기막히나 시끄러운 익산시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추가 유발하고 있다는 것. 입찰가격 배점은 20점이다.

이와 관련, 관련업체에서는 해당 지역업체 A사를 지목하고 있어 향후 결과에 따른 파문도 예상된다. 만약, 이대로 입찰이 실시될 경우 이 입찰에 참여할 업체는 불과 3~4개에 불과하며, 참여 업체 대부분도 A사의 들러리 업체라는 게 관련업체의 분석이다.

익산시에서 발주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을 적용하여 발주하는 것이 타당한 적용이라고 항변하고 있으며 제안서 입찰 진행은 관련법을 무시한 입찰이라고 밝혀 업체는 향후 감사 청구 등 법적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고 우선 업계의 뜻을 모은 항의서(연판장)를 작성 익산시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은 확산 될 것으로 보인다.

도, 취약계층 전기재해 예방 위한 주택 전기설비 점검 실시

임실군 · 한전 등 4개기관 협력... 임실군 2세대 방문 누전차단기 · 전등 교체 등

전북특별자치도는 27일, 임실군,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본부,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와 함께 임실군 내 취약계층 2세대를 직접 방문해 전기재해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누전차단기 및 인입선 교체, 전등 교체 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방문은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 임실군수, 한국전기안전공사전북본부, 한국전력공사전북본부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도민안전실장은 전기화재 예방 요령을 안내하고, 전등을 교체하는 등 현장중심의 예방행정을 실천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도내 주택화재 발생은 총 469건 발생했으며, 이 중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108건으로 전체의 약 23%를 차지했다. 이는 부주의(250건, 5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

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2023년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화재 예방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이날 점검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각 세대의 전기설비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노후·위험설비는 즉시 교체했으며, 한국전력 공사는 임실군 관촌면 내 취약계층 132세대에 총 800만 원 상당의 전기안전용품을 기증하고, 인입선 교체를

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2023년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화재 예방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이날 점검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각 세대의 전기설비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노후·위험설비는 즉시 교체했으며, 한국전력 공사는 임실군 관촌면 내 취약계층 132세대에 총 800만 원 상당의 전기안전용품을 기증하고, 인입선 교체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 오택림 도민안전실장은 “전기 화재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전기취약 세대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전기재해 예방사업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올해 총 2억원(세당 약 8만8,000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도내 14개 시군 2,253세대를 대상으로 전기안전점검과 노후설비 교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실군에는 132세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반호 기자

도, 적극행정 경진대회... 도민 체감 우수사례 시상

최우수상 - 도지사 관사 '하안양옥집' 탈바꿈 사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과 함께 만드는 적극행정을 확산하기 위해 경진대회를 열고 우수사례를 시상했다.

도는 27일 도청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도 분청과 소방본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적극행정에 앞장선 공무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난 21일 1차 실무심사를 통과한 5건을 대상으로 도민 온라인 투표와 최종 발표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도 문화산업과의 '하안양옥집' 사례가 차지했다. 도지사 관사였던 하안양옥집을 전시·공연·체험 공간으로 탈바꿈해 도민에게 개방한 결과, 연간 1,500만명이 찾는 한옥마을 관광과 도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열린 문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우수상은 전북소방본부 소방행정과의 '전북형 안전 캠프'가 선정됐다. 전국 단위 어린이 안전교육 수요를 지역 발전의 기회로 연결해 민관이 함께 체험형 캠프를 운영하며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려상에는 △도 금융사회적경제과의 '전국 최초 관테크육성지구 지정', △전개공의 '디지털 기술 나눔 모델', △도 주택건축과의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뽑혔다.

이반호 기자

전북자경위, 부안 서림지구대 방문... 유공자 표창 · 현장 간담회 진행

‘2025년 2분기 베스트 자치경찰’ 4명 선정... 서유라 순경 등 포상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연주)는 27일 부안군 서림지구대를 방문해 지역 치안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현장 경찰관들을 격려하고, 자치경찰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자치경찰 사무를 직접 수행하는 일선 지구대를 찾아 치안 현

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부안경찰서장, 서림지구대 유공 경찰관 등 18여 명이 참석해 지역 맞춤형 치안 정책의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는 '2025년 2분기 베스트

자치경찰'로 선정된 서유라 순경(부안 서림지구대 소속)에 대한 표창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서 순경은 보이스 피싱 예방 교육, 지역 치안 수요 분석, 협력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공동체 치안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지역 맞춤형 치안 활동에 적극 참여한 유공 경찰관 4인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이번 분기에는 △전주덕진경찰서 이중지구대 박진호 경장 △군산경찰서 수송지구대 임정원 경감 △완주경찰서 둔산파출소 이태현 경위 △부안경찰서 서림지구대 서유라 순경이 선정됐다.

서유라 순경은 수상 소감에서 “경찰관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의 신뢰를 받는 경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반호 기자

채 권 신 고 공 고

본 회사는 2025년 8월 19일 임시총회에서 해산 결의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해 채권이 있는 분은 2025년 10월 28일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8월 19일
진안홍삼품질인증협동조합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1021
청산인 고영만

장수천천사랑 제3회 전국 트로트 가요제

아름답고 청정지역인 장수군 천천면에서 '장수천천사랑 제3회 전국 트로트 가요제'가 열립니다.

농촌 문화예술 활성화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의미있는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1. 일시 : 8월 30일 오후 2시
- 2. 장소 : 장수군 천천면 하늘내 체육관(위치: 천천면 사무소 앞)
- 3. 주최 :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장수군지부
- 4. 주관 :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
 계전주 천천면 향우회
- 5. 주요행사 : 축하공연(식전 및 식후), 개회식, 노래공연,
 행운권 추첨 등

**문의: (063)231-6669, 010-7304-5665
(063)285-6676, 010-4658-8198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